

미화원 안전과 수거율 급감 사이 '청소차 딜레마'

광주 자치구 사고 우려에 청소차 발판 제거...수거량 크게 줄어 민원 급증 시설관리공단 직원까지 투입해 수거...차량·인력 확대 한계 속 '골머리'

광주지역 지자체가 환경미화원 안전을 위해 '청소차 불법 발판'을 제거했지만, 쓰레기 수거율이 급감해 고민에 빠졌다.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차량에 타고 내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 쓰레기 수거율이 급락한 탓에 주민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4일 광주시 북구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중순께 북구 지역 내 청소차 총 48대(음식물쓰레기수거 17대, 종량제 수거 18대, 재활용 수거 13대) 중 발판이 설치된 재활용 수거 차량 13대에서 모두 발판을 제거했다.

청소차 발판은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지자체 환경미화원들은 주택가 골목골목마다 적치된 쓰레기 수거시 차량에 타고 내리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적잖은 달개를 인력으로 개조해 사용했다. 짧은 구간을 이동하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의 특성상 발판 탑승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구 시설관리공단은 지난달 경남 양산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이 청소차 발판에서 떨어져 숨지자 발판을 모두 제거했다.

환경미화원 안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였으나 재활용 쓰레기 수거량은 격감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발판을 제거하기 전인 7월 재활용쓰레기 수거량

은 96만 5030kg였지만, 제거이후 14% 감소(8월 재활용 쓰레기 수거량 82만 4840kg)했다는 것이다.

당달 주민들의 쓰레기 수거 민원이 급증했다. 쓰레기를 빨리 수거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한달 평균 20% 가량 더 늘었다는 것이다.

실제 민원 내용 대부분이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아 악취와 부패 등으로 불쾌감을 유발한다'는 내용이라고 한다.

북구 환경미화원 총 96명으로는 한계가 있어 급기야 공단직원들까지 쓰레기를 수거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북구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9월 생활폐기물 청소차의 발판을 제거했던 동구는 이달 재활용 차량의 발판 제거에 나섰고 서구도 지난 7월부터 발판을 제거했다.

앞서 2022년 6월 광산구가 선도적으로 청소차량의 발판을 제거했고 남구도 지난해 3월 발판을 없앴다.

동구와 서구 역시 "여느 때와 달리 이 시간에 쓰레기가 왜 그대로 있냐"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평소 4통 가량 오던 민원전화가 10통 수준으로 늘어났다는 게 담당자들의 하소연이다.

남구에서 일하는 한 환경미화원은 "당시 하루에 한 차례 수거했던 구간을 발판 제거 후에는 격주로

돌아야 할 만큼 수거량이 현저히 떨어졌었다"고 말했다.

쓰레기 수거에 한계를 보이자 남구는 20억원을 들여 지난해 총 10대의 청소차를 증차했다.

지난 2017년 광주에서 2주만에 환경미화원 2명이 도로 위에서 숨지면서 광주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한국형 청소차'가 쓰레기 수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기존 쓰레기 수거차량의 적재 용량이 5인대 비해 한국형 청소차는 4이기 때문이다.

환경 미화원들은 "한국형 청소차의 경우 적재 용량이 크지 않고 차량 양면으로 문을 여닫아야 하는 불편함과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가 있어 발판 탑승과 위험도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자치단체는 이같은 상황에서 추석명절 쓰레기 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쓰레기가 다량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장 차량이나 인력을 늘리기에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다.

북구의 경우 청소차 증차와 환경미화원 인력증가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광주북구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위해 발판 제거 결정을 내렸다"면서 "그동안 환경미화원들이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해왔던 작업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으니 당분간 양해해 주길 바란다.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등 주민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4일 광주시 북구 문흥동의 한 거리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종량제 봉투를 청소차에 실어 나르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아파트 200여채 사들여 전세사기 일당 송치

경찰이 일명 '무자본 겹투자'로 광양지역 아파트 200여채를 사들여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2대는 A(58)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지인 8명도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202채의 아파트를 구매해 전세를 내줬다가 임대인 121명

에게 임대차 계약만료 후 전세보증금 100억여원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들은 A씨의 전세사기를 알고 있음에도 투자를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일명 겹투자로, 자본금 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다시 전세를 놓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임대보증금보다 저렴하면서도 임대차 수요가 많은 20년이상 노후화된 중저가형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받아 매매가격보다 2000만~3000만원 높은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주를 꺼리는 임차인들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보완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키기도 했다.

피해자 가운데 전세 보증금 반환 상환에 가입한 50명은 이들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총 45억원을 변제받았다.

경찰은 보증보험 미가입자 49명의 계약 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공군 1전비 운전병 영내서 음주운전하다 "황"

군사경찰, 2명 조사

공군 제1전투비행단(1전비) 소속 운전병 2명이 영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시설물을 들이받았다.

4일 1전비에 따르면 전날 새벽 1전비 소속 운전병 2명이 음주운전 혐의로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영내에서 술을 마신 뒤 군용 승용차를 운전하다 기지 외곽 도로 철조망 한곳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활주로 등을 달리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차량 속도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1비 수송 초대형 사고 설명해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이들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리는 글이 올라왔다.

1전비 측은 "병사들의 술 반입 경로와 음주 경위·장소 등은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면서 "군수사 이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무안 고독사, 숨진지 3일만에 발견

무안에서 홀로 살던 50대 남성이 숨진 지 3일만에 발견됐다.

4일 무안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30분께 무안군 현경면의 한 주택에서 A(56)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A씨 친구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거주지를 확인하다 A씨를 발견했다.

발견당시 A씨는 숨진지 많은 시간이 경과한 상태였고 1차검시 결과 최소 3일 전에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A씨는 혼자 살고 있던 남성으로 평소 지병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전 광주시장 동생 알선수재 혐의로 법정구속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 실행

전 광주시장인 형을 내세워 특혜성 납품 계약을 따낸 친동생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소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6개월을 유지했다.

철강회사 대표인 A씨는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호반 그룹으로부터 133억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받아 4억2000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력한 시장후보였던 A씨의 형은 선거에서 당선됐고, A씨는 광주시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게 추천해주는 명목으로 납품계약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광주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호반 그룹측에 '광

주시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장에게 알선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유력한 광주시장 후보였던 친형을 내세워 가공 철근 납품 기회를 제공받았다"면서 "광주시장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부정 이득을 취하는 수단으로 전락시켜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그룹 회장이 A씨와 만난 2018년 1월부터 철근 납품 계약이 시작됐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그룹 회장을 만난 후 입찰 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철근 납품 계약이 체결된 것은 이례적이고 특혜에 해당된다"면서 "광주시의 특정감사 실시 자체가 특정 건설사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해 그룹측은 중대한 경제적 편익을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경찰청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갇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